■ '정운찬 변수' 與 권력지도 바뀌나

鄭-朴-鄭… 新 트로이카 구축?

〈운찬〉 〈근혜〉 〈몽준〉

잠룡들 군웅할거… 경쟁 조기 과열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에 대한 국무총리 지명으로 차기 대선을 향한 여권 내 권력지형이 꿈틀거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도 거론되던 여권 내 대선주자 사이에 정 총리 후보가 들어가면서 여권 대선후보를 향한 경쟁구도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올 초부터 정 전 총장에 대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주자로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확산하고 있어 현재는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실제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지난 6월 '정치 2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 힘의 중심추가 박 전 대표로 쏠리면서 독주체제가 형성돼 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친이(친이명박)계에게는 위협이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 총리 후보자가 등장한 것이다.

당 전체 입장에서도 박 전 대표의 독주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키워 박 전 대표와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따라서 정 총리 후보 지명이 향후 여권 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박희태 대표가 내달 28일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위해 7일 대표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대선후보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 대표직 승계를 통해 당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오 전 최고위원도 '칩거'를 끝내고 당 복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여권 내 대선후보 경쟁은 조기 과열 양상마저 보일 조짐이다.

정 최고위원은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전대 출마에 이어 이제는 대표직을 통해 당내 입지 확보와 함께 정치력을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에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친박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유럽 특사 역할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박 전 대표가 또 잠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월 재보선 지원도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도 불변이라는 후문이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정 총리 후보자와 경쟁하듯이 당장 정치 일선에 나선다면 오히려 정 총리 후보자를 키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 후보 지명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개혁성향의 소장파 그룹도 차츰 사교육비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에서 차츰 개혁적 목소리를 키우면서 독자세력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청와대 내에서 소장파 그룹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당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시켜 세력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6일 "정 총리 후보자의 등장으로 여권 대선구도가 복잡해지긴 했으나 보다 역동적이 됐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여권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외출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방 맞은 민주 '참민생'으로 맞선다

중도실용 허구성·'정운찬 정체성' 등 입증 주력

'정운찬 총리 카드'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각종 서민 정책으로 맞선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에서 '가짜 민생' 대 '참 민생'간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여권의 중도실용 드라이브에 대한 허구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민경제 회생법 , 등록금 인상 제한법, 효도·복지법, 4대강 저지법, 균형발전법 등 역점 추진할 7대 '참 민생입법'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의 '부자감세'에 맞서 '서민감세'를 통해 정책 대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EITC) 대상을 자영업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생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관심사인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관 상임위원가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 구성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면을 반전시킬 결정적 '한 방'을 내놓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총가동하는 등 자료수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 총리 내정에 따른 여권 내부의 균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내부 분열이 가시화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 내정자가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쏟아낸 비판적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과 함께 '세종시 논란'도 쟁점화 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실질적 지방분권이 급선무"

강운태 의원, 행정개편 조건 제시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6일 행정개편 방향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원과 기능의 재분배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우선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려면 세원과 사무 배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단기적으로는 '3할 자치', 중·장기적으로는 '5할 자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이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가 자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통합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심화 등 자칫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큰 틀의 개편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주민들이 동의한 지역부터 차례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만약 도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포장마차' 타고 민심 탐방

천정배 의원, 14일부터 전국 순회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포장마차용 트럭을 끌고 전국 민심탐방에 나선다.

천 의원측은 6일 "오는 14일부터 포장마차용 트럭을 타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줄곧 명동성당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하다가 투쟁 공간을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천 의원과 그의 보좌진 5~6명은 13일 명동성당에서 전국순회 발대식을 가진 뒤 다음날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 부산, 춘천 등 전국 17개 도시를 돌 계획이다.

이들은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운영, 서민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4대강 살리기, 비정규직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미디어법 반대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천 의원은 이번 전국 순회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정책을 수립하고 진보개혁진영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지역 정치인 '눈치보기' 여전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이후, 지역 정치권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호남의 희망을 상징했던 정치인이었던 DJ의 삶 자체가 치열한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DJ의 대통령 퇴임과 서거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전과 응전'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J 서거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은 별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전과 응전'을 선택하기 보다는 '눈치 보기'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자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은 5~6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확실한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상당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은 도전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이다.

지지율, 공천 과정, 당내 역학구도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르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괜히 서두르다가는 안팎으로 견제를 당할 수 있는데다 추후 정치적 입지도 좁아질 수 있어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일부 지역 의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진로와 미래를 제시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모색하기 보다는 당 내부의 정치 공학적 구도 탐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 의원은 "먼저 나섰다가는 각종 견제를 당할 수 있다"며 "일단 관망하면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판단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적 리더로 성장하거나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과감한 도전에서 시작된다.

DJ는 목숨을 걸고 독재정권에 대한 도전에 나섰고 치열한 응전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완성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세가 척박한 영남에서 '바보 같은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반복했으며 그것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이 됐다.

DJ와 노 전 대통령은 바로 이 같은 극한 도전을 통해 정치적 리더로 성장했으며 시대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민심은 영리하기보다는 우직하고, 정치적 계산보다는 온 몸으로 시대를 밀어붙이며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tuim@kwangju.co.kr